

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(주요정책부문)

2020. 1

금 융 위 원 회

금융위원회

1. 평가개요

□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

- 평가대상 : 총 39개 관리과제 63개 성과지표
- 평가지표 : ^I계획수립의 적절성*(30점), ^{II}계획대비 성과 달성도(50점), ^{III}포괄적인 정책효과성(20점)

*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(10점),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(10점), 성과지표의 적절성(10점)

I-1.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

- 계획수립 단계에서 외국 사례·통계 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·전문가·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적 충실성을 확보했는지 여부

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

②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실시 (공청회, 현장간담회 등)

* 19년도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정책과제의 경우 **상황변화가 없는 경우**에 한하여 **기존('189년 이전)에 실시한 것을** 실적으로 인정

⇒ 상황변화로 새로운 조사·의견수렴이 필요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요인

측정방법

판단근거	점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, ② 모두를 실시했으며 - 사전조사·의견수렴이 충분히 계획수립에 반영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	8~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, ② 모두를 실시했으나 -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계획수립에 실질적인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	4~7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, ② 중 하나라도 시행되지 않은 경우 	1~3점

- **과제의 특성상 사례분석이 불가능**하거나 의견수렴이 **불필요**한 경우, 계획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여 점수부여

I-2.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

측정방법

○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

※ 강제배분(상대평가) 지표

판단근거	배분비율	점수
- 과제 간 「2019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」 상 과제추진계획(분기별)을 비교	30%	8~10점
- 추진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이행난이도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순위를 나열하여	50%	4~7점
상위 30% → 8~10점 중간 50% → 4~7점 하위 20% → 1~3점 부여	20%	1~3점

I-3. 성과지표의 적절성

측정방법

○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

※ 강제배분(상대평가) 지표

판단근거	배분비율	점수
- 과제 간 「2019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」 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비교	30%	8~10점
- 지표가 정책목표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목표달성 난이도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순위를 나열하여	50%	4~7점
상위 30% → 8~10점 중간 50% → 4~7점 하위 20% → 1~3점 부여	20%	1~3점

II.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

II-1.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

측정방법

- 과제별 「2019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」 상 **추진계획**(분기별)의 **준수** 여부

판단근거	점수
-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에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 한 경우	14~20점
-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% 이상인 경우	7~13점
-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% 미만인 경우	1~6점
[가점] 3조항 이상의 법률 제·개정 완료	+5점
3조항 미만의 법률 제·개정 완료	+3점
시행령·규정 제·개정 완료	+2점
내부지침·기준 제·개정 완료	+1점

- 일정지연이 **외생적 요인**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

II-2.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

측정방법

○ 「성과관리시행계획」 상 **성과목표 목표치 달성 여부**

*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
성과지표 목표 달성율은 여러 지표의 '평균치'로 계산

** 성과지표가 수치가 아닌 '000 방안 마련', '000 시행령 개정' 등 All or Nothing의 성격을 가진 경우 목표를 달성했으면 100% 달성하지 못했으면 기울인 노력을 토대로 달성율을 판단

판단근거	점수
-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% 이상 달성 했으며 - 목표치 달성 이후 모니터링·홍보활동, 법안통과를 위한 대국회활동, 하위규정 제·개정준비 등 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	25~30점
-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% 이상 달성 했으나 - 목표치 달성 이후 모니터링·홍보활동, 법안통과를 위한 대국회활동, 하위규정 제·개정준비 등 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경우	20~24점
-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0% 이상 ~ 100% 미만 달성	16~19점
-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0% 미만 달성	15점 이하

○ 목표치 달성 실패가 **외생적 요인**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

III. 포괄적인 정책 효과성

○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지표 개선 및 정성적 정책효과 발생 여부

㉠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

㉡ 국민불편 해소,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

- ㉠ 성과지표로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관리과제 추진으로 개선되는 계량화된 지표
- ㉡ 통계·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기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

※ 강제배분(상대평가) 지표

판단근거	배분비율	점수
- ㉠, ㉡ 두 가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나열하여 상위 30% → 14~20점 중간 50% → 7~13점 하위 20% → 1~6점 부여	30%	14~20점
	50%	7~13점
	20%	1~6점

측정방법

2. 평가결과

(1) 총 평

□ '19년도 총 22개 과 중 15개 과(팀)의 3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,

- 매우우수 1개(2%), 우수 6개(15%), 다소 우수 7개(17%), 보통 12개(34%), 다소 미흡 6개(15%), 미흡 5개(12%), 부진 2개(5%)로 나타남
- 우수 이상 과제는 「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·대응체계 구축」, 「주총 활성화·공시품질 제고 등을 위한 주주권 행사지원」 등이며,
- 미흡 이하 과제는 「금융산업 진입규제 정비」 등인 것으로 평가됨

⇒ 미흡 이하 과제의 보완필요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·관리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

-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관리과제(「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」, 「결제 인프라 혁신 및 금융결제업 개편」 등)가 전반적으로 우수평가를 받은 점에서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의 노력이 인정된 것으로 보임

□ 총 39개 관리과제의 6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,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약 93%로

- 5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, 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
-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**녹록지 않은 국회 입법여건**(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,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재 신설), **대내외 경제여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 지연**(선순환 보증지원방안 마련)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

(2) 주요성과

□ 「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·대응체계 구축」, 「주총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위한 주주권 행사지원」 등 7개 과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좋은 평가를 받음

○ (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·대응체계 구축) 국·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* 및 모니터링 체계**를 구축·운영

*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, 거시금융회의 등

** 조기경보시스템(EWS)을 통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위기발생가능성을 매월 분석

○ (주총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 지원)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제도(5%룰) 개정* 및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** 시행('20.2.1.)

* 5일내 상세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'경영참여'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'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'를 단순투자와 일반투자로 구분하고 공시의무 차등화

** 임원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세부 경력사항 이사회의 추천사유 등을 주총 참고서류로 제공

○ (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)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에 기여

- '19년 한해 정부 전체 샌드박스 승인 건수(195건) 중 약 40%인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

○ (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) 현장밀착형 과제 발굴을 위한 T/F 회의 회의를 거쳐 4개 분야*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발표

* ① 금융소비자 체감형 서비스 강화 및 관행 개선, ② 금융회사내 소비자 보호체계·기능 강화, ③ 현장 밀착형 금융감독 구현, ④ 소비자보호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강화

○ (결제 인프라 혁신 및 금융결제업 개편) 공동 결제시스템(오픈뱅킹)을 전면시행*('19.12.18)하고 금융결제업 개편을 추진

* (가입자수) '20.1.5일 까지 1,149만명이 가입하여 2,139만 계좌를 등록 (기대효과)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, 금융결제산업의 혁신 촉진

○ (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) 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비중이 크게 상승*하고, 민간은행의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한 유인 마련

* 경제위기시 주택가격 하락과 상환능력 저하가 동시에 발생하여 서민의 주담대 상환부담이 가계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차단효과 기대

○ (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) 금융그룹 내 출자 및 내부거래 등으로 인하여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금융그룹 감독제도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각 금융그룹은 그룹위험관리체계를 마련

※ '18.7월부터 「모범규준」으로 그룹차원의 자본건전성 관리 및 위험관리실태를 모의평가 하는 등 법제화 전단계에서 시범적용 중('19.7월, 모범규준을 1년 연장 운영)

(3) 개선·보완 사항

□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해 7개 과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·보완 추진

- (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) 자본시장 특별 사법경찰 출범('19.7.18.)등의 성과가 있었고, 금융위·금감원 공동 조사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으나, 공동조사 사례가 없음
 - 조사심리기관협의회(분기 1회 이상)를 통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사건을 선정하고 공동조사 첫 사례 추진 및 향후 활성화 추진
- (혁신·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) '19년 중 선순환 보증 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,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의 필요성 대두되어 발표·시행 연기
 - 향후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'20년 중 종합적인 선순환 보증체계 구축방안을 마련·발표할 계획
- (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) '19년 상반기 중 모든 신청인의 인가요건 미충족*으로 인가 지연되었으나
 - * ① 키움뱅크(혁신성 미흡), ② 토스뱅크(지배구조 및 자금조달 미흡), ③ 애니밴드스마트은행(형식요건미비로 신청반려)
 -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(7.16)에 따라,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 및 「종합적 컨설팅*」 제공 등을 통해 토스뱅크를 신규예비인가('19.12월)
 - * 인가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, 신청희망 기업의 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·지원
 - 향후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
- (상시적·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촉진) 기업신용위험평가 실시하여 상시적·선제적으로 구조조정기업을 선정*하고,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,
 - * 대기업(8월),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(12월)
 - 일부 성과지표(예: 취약계열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평가 실시)는 구조조정 기업 경영정상화 등 정책효과가 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

- 평가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, 시장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실무 TF 구성 및 운영,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보완하기 위한 부채 투자·주력산업 투자 전용펀드 조성 검토 추진

- (청년·대학생 주거부담 완화) 청년 주거특성*을 반영한 전월세 보증금·월세자금·대환지원 등 3종의 2%대 저금리 상품을 주금공 전액보증을 통해 총 1.1조원을 공급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,

* 청년 평균 보증금 : 전세 6,014만원, 월세 535만원

- 성과지표가 '상품출시' 등 단순 투입지표로 구성되는 등 상대적으로 과제의 추진 난이도가 낮고, 구체성이 낮은 점이 작용
-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측정하여 정책결정에 환류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공급실적 등 산출지표를 포함하여 성과지표 설정 추진

* 공급실적(공급목표 대비 실제공급액 등 달성도), 금리부담 경감효과 추산 등

- (금융산업 진입규제 정비) 소액단기보험회사(보험업법),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(자본시장법) 등 소규모 인가단위 신설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였으나, 국회내 논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함

- 국회계류중인 법안(보험업법, 자본시장법)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, 언론 보도, 의원실 면담 등 노력을 강화하고
- 주기적인(매 반기)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기초로 금융업권별 인·허가 단위 신설·세분화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

- (청년·지역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) “청년 창업 기업 전문 보육공간” 「FRONT1」 조성 추진 및 신보·기은의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43.6조원 지원 등 성과가 있으나,

- 「FRONT1」 주요시설인 마포혁신타운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문제 발생 우려로 개소 전 일부부분개소 계획이 불가피하게 중단됨
-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, 필요한 추가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여 당초 준공 일정(‘20.6월) 준수 추진

(4) 평가결과 종합

관리과제명		자체평가결과 (평가등급명)
I.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.		
I-1-①	가계부채 관리 강화	다소우수
I-1-②	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	보통
I-1-③	취약차주 안전망 강화	보통
I-1-④	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	우수
I-2-①	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·대응체계 구축	우수
I-2-②	상시적·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	부진
I-3-①	자동차·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	보통
I-3-②	혁신·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	미흡
I-3-③	청년·지역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	미흡
II.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.		
II-1-①	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	매우우수
II-1-②	결제인프라 혁신 및 금융결제업 개편	우수
II-1-③	P2P 대출 법제화	다소우수
II-2-①	데이터활용 저해하는 규제 정비	다소우수
II-2-①	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	부진
II-2-②	금융산업 진입규제 정비	미흡
II-2-③	보험시장의 경쟁과 혁신 촉진	다소미흡
III-2-④	보험판매 채널 건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	보통
II-3-①	그림자규제 정비	보통
II-3-②	검사·제재 혁신	보통

Ⅲ.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,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.		
Ⅲ-1-①	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	보통
Ⅲ-1-②	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	우수
Ⅲ-1-③	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	다소미흡
Ⅲ-1-④	사회적경제 기업 평가체계 및 DB 구축	보통
Ⅲ-2-①	보험상품 사업비·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개선	보통
Ⅲ-2-②	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·투명성 제고	다소우수
Ⅲ-2-③	소비자 일상생활 금융편의 확대	보통
Ⅲ-3-①	중금리대출 활성화	보통
Ⅲ-3-②	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	보통
Ⅲ-3-③	주택연금 제도개선	다소우수
Ⅲ-3-④	청년·대학생 주거부담 완화	미흡
Ⅳ.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.		
Ⅳ-1-①	금융그룹감독 제도 도입	우수
Ⅳ-1-②	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	다소미흡
Ⅳ-2-①	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	미흡
Ⅳ-2-②	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	다소미흡
Ⅳ-2-③	불법사금융·금융사기 엄정 대응	다소미흡
Ⅳ-2-④	주총활성화·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지원	우수
Ⅳ-3-①	금융투자업 영업자율성 확대	다소우수
Ⅳ-3-②	파생상품시장 활성화	다소우수
Ⅳ-3-③	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개선	다소미흡